



보도 일시	2022. 5. 13.(금) 11:00	배포 일시	2022. 5. 13.(금) 09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장 장운정 (044-215-7130)
		담당자	사무관 정민철 (jmc71j@korea.kr)

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 통보(5월 13일)

- ◇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
- 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노력 배가

□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반영 및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「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」을 각 부처에 통보(5월 13일)하였음

* 「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은 3월 31일 기 배포

□ 각 부처는 금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*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할 예정

* (예시)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, 청년도약계좌 신설, 병 봉급 단계적 인상,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,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등

□ 아울러,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토록 하였음

○ 먼저,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

-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하여, 최소 10%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요구하고,

-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,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

- 아울러, 재정 수입기반 확충과 기금건전성 관리노력도 배가할 계획
 -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여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 발굴
 -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 추가 발굴,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강화

□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



11 새정부 핵심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

- ① 중앙관서는 **새정부 정책과제**의 **추진소요를 반영**하여 요구
 - (역동경제) 주력산업 고도화, 중소·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, 교통·물류체계 혁신 등 반영으로 **민간주도 경제도약** 뒷받침
 - (행복사회)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, 생애단계별 직업훈련,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 등 **두터운 고용·사회안전망** 구축 지원
 - 온전한 손실보상,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등 **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·재기**를 위한 지원 강화
 - (미래대비) 초격차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,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,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관련 지원 확대
 - (글로벌역량) 국방혁신 4.0, 병월급 인상 등으로 **첨단강군** 육성을 지원하고, 능동적 경제안보 협력체계 구축 지원
 - (지역발전) **농산어촌 지원 강화** 및 지방대학 혁신 뒷받침
- ② 새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식, 연차별 투자소요 등을 포함한 **세부 중기 실행계획**을 첨부
 - ※ 既 배포한 중기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활용

<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(예시) >

- ① **기초연금** 단계적 인상(30→40만원)
- ②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**청년도약계좌** 신설
- ③ **청년 원가주택 30만호**, **역세권 첫 집 20만호** 공급
- ④ **병역 의무**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**봉급 인상**
- ⑤ 0~11개월 아동에 **월 100만원 부모급여** 지원
- 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**생계급여**) 대상 및 **수준 확대**
- ⑦ **소상공인·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** 운영
- ⑧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**내일배움카드 확충**
- ⑨ **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** 및 **재산기준 완화**

②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추진

- ① (재량지출)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%를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예산 요구

* 집행 부진, 연례적 이전용, 관행적 보조·출연·출자, 외부지적 사업,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절감대상에 포함

- ② (의무지출)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,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

③ 재정수입 기반 확충 및 재정관리 강화

- 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

- (국세)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, 고액·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
- (세외수입) 세외수입 추가발굴 및 미수납액 회수 노력 강화
 -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제고, 유휴 국유재산 매각·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·징수
 - 한은잉여금, 융자원금 회수 등 주요 세외수입원의 경우 경제여건 변화, 최근 실적 등을 감안, 수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
 - 사회보장기여금, 과태료,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

- ② 기금 여유재원, 민간투자 등 신규재원 발굴 확대

- (기금) 기금별 중장기 재정수지·적립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여유자금의 공자기금 예탁, 일반회계 전입 등 확대
 - (민간)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여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*을 발굴하여 민간부문 이양 추진
- * (예)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,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 사업 수행 등

- ③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

- 기금별 자체수입 추가 발굴,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(他 기금·회계 예수·전입금 제외) 개선 노력